

2022. 10. 31.(월)

# 정 책 참 고 자 료

“특별취급”

본 문건은 ‘대외공개, 수신처에서 他기관으로의 再전파, 복사’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경 찰 청

# 목 차

---

① 이태원 사고 관련,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

② 이태원 사고 관련,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

③ 이태원 사고 관련, 온라인 특이여론

산업현장 안전관리,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

자체 ‘안전한국훈련’ 대비 실태 및 현장 요망사항

## □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'장례비·치료비·보상금' 관련 갈등관리 필요

- 보상 문제는 대형참사 때마다 가장 침예한 갈등 요인이었으나, 이태원 사고는 행사 주관단체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
  -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구호금 지원을 발표 했지만, 통상 대형참사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※ SNS에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족이 8~10억 원을 받았다면 정부가 1억5천 원, 서울시 1억 원, 용산구가 1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제기
- 지자체 실무자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더라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, 국민 애도 분위기 속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
-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사고 4일 만에 유가족과 합의해 큰 갈등 없이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 사례로 평가되는데
  - 경기연구원에서 사고수습 과정에 대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,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며 초기에 '가족대표를 정해 대화창구를 단일화'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함
- '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의정부시는 부상자들이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게 치료비를 지급보증한다고 밝혔다가, 이후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일부만 지원하겠다고 번복해 많은 비난을 받았고
  -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에도 지자체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했지만, 상급병실 사용료, 간병비 등 세부 기준이 없어 청구 과정에서 지자체·유족 간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대비 필요

## □ 단골 비난 소재인 '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·처신' 철저히 차단

- 세월호 당시, 경기도지사의 추모 자작시 게재, 교육부 장관 과잉 라면 취식, 세종시장 폭탄주 회식, 새누리당 某 의원의 '교통사고' 발언, 행안부 국장급 기념사진 촬영 등이 이슈화되며 비난 직면

-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난 보도 자제를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
  - 박근혜 前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처럼, 대통령 보고시각·지시사항 등을 분·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미흡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'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당시 사고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물청소해 논란이 됐는데
    - 대구시장은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'당신들이 청소에 동의하지 않았나'며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
  - 이번 이태원 사고를 두고 온라인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난하며, '피해자 개인 책임'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
    - 세월호 유가족은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네티즌을 비난하며, '89년 영국 축구장 압사 사고 사례를 거론' 당시 英 경찰은 훌리건 난동 때문이라며 참사 책임을 관중에게 돌렸으나, 27년 만에 법원이 경찰 책임을 인정하자 결국 英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며, 시민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은 무한대라고 주장
    - 정부 등 관계자가 원칙적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
  - 한편, 교육부 차관은 10.30. 이태원 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11.5. 예정된 중고생 촛불집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발언
    - 기자들은 온라인상 '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다수가 모이는 정부 규탄 집회를 금지할 것'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고 각 단체들이 애도 여론을 의식해 줄줄이 집회를 취소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언급이었다는 반응 다수
    - 부처 브리핑, 회의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발표도록 당부

## 이태원 사고 관련,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

### □ 단체별로 예정된 집회 등 행사를 취소·연기하고 주모 열기 동참

- 각 진보·보수단체들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직 수습단계인 만큼, 우선 '주모, 애도'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
  - △ 한국노총, 11.5. 전국노동자 대회 취소 검토 중 △ 대한간호협, 11.2. 간호법제정 촉구 집회 무기한 연기 △ 전장연, 삼각지역 선전전·삭발투쟁을 잠정 중단하고 11.7.경 재개할 예정
  - △ 한교총 11.5. 코리아페레이드 △ 자유통일당 11.5. 국민대회 등 보수·기독교단체 집회도 정부 애도기간을 고려해 연기·취소
- 그럼에도 일부 진보성향 단체들은 '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'로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끌고갈 수 있을 만큼 대형 이슈라며,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개최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
  - 다만, 아직 국민 여론의 향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, 사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부르게 '정권 책임'을 내세웠다가 역풍 가능성이 있는 만큼,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 검토 방침

### □ 진보단체 등,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저마다 정부 규탄 논리 모색 중

- 진보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, 지난 정부의 헬러원 대비 조치와 올해를 비교하는 카페글·카톡 지라시 등을 공유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
- 촛불전환행동은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우며 향후 촛불집회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여론추이를 예의주시 중이고

- 관계자에 따르면, 주말 촛불행동 집회 때 삼각지역에 경찰 1만 명, 대통령 출퇴근 시에는 700명을 배치한 데 비해, 10만여 명이 운집한 헬러윈 행사에는 경찰이 200명만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'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은 재난현장에나 가야 할 것'이라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폄하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함
  - 민주노총은 10.30. 19시 핵심집행부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어, 회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향후 투쟁 수위조절 및 일정변경을 위해 월요일부터 세부계획을 논의할 방침
    - 한국노총은 10.30. 논평을 통해, 정부 상대로 철저한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, 수습 이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재난 원인을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
  -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'사망자 중 여성이 97명, 남성이 54명으로 알려진다'<sup>오전 10시 기준</sup>며 여성 피해가 많았던 점을 거론
    - 당장은 '여성안전' 문제를 본격 꺼내들긴 어렵지만, 추후 여가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함
- '세월호 사고'와의 연계 조짐도 감지, 정부 대응 미비점 집중부각 전망**
- 전국민중행동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과, 그 연장선에서 들어선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
    -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올린 '이태원 참사, 당신 잘못이 아니다' 題下 SNS 글\*을 공유하며, 정부 대응상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'제2의 세월호 참사'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
  - \* '89년 英 축구장 참사를 들어 정부가 끝까지 국민 보호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
  -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던 인권활동가가 다수 참여한 '생명안전 시민넷'은 정부의 인도적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

- \* 공동대표 김선명, 김훈, 김혜진, 나승구, 박래군, 박승렬, 백도명, 송경용, 황상기 / '17. 11. 23. 창립, 재난사고 · 라-우크라 전쟁 등 관련 성명 발표 · 기자회견 개최
- 세월호 당시 문제된 △유가족과의 정보공유 부재 △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짜뉴스 등에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
- 관계자에 따르면, 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함

#### **□ 보수단체, 대정부 투쟁 소재가 될 것을 우려, 맞대응 방안 모색**

-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대통령님 담화처럼 일단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며, 사고원인 파악이 진행 중인 만큼 선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추모 분위기 속에 상황을 관망할 방침인데
  - SNS상에 원인규명도 안됐는데 벌써 '다시 노란리본을 꺼내 참사 책임을 물자' 등 선동성 글이 회자된다며 비난
  -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창 이슈화된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기대하는 세력이 개입했거나, 추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
- ※ 일부 보수단체 활동가는 당일 도심권에서 개최된 촛불행동 집회 참석인원 중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 함
- 자유통일당 측은 당분간 집회 자체 방침이나, 진보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때처럼 여론몰이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대응이 불가피한 만큼,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

## 이태원 사고 관련, 온라인 특이여론

### □ 자극적 사진·영상이 여전히 확산, 지속적인 관리 및 자정 촉구 필요

- 사고 초기부터 유튜브·트위터 등 SNS에는 사망자들의 시신이나, CPR·구조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·사진이 여과 없이 공유 중
  - 경찰청이 주요 포털 및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담당 시도청을 지정하고 허위사실 생산·유포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 방심위 등에 28건을 삭제·차단 요청<sup>10. 30. 15시 기준</sup>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고
  - 포털·커뮤니티에서도 자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, 이미 많은 영상·사진이 공유되어 제목만 바꿔 재차 게재되는 상황
- SNS 상에는 피해자를 애도하는 게시글 못지 않게 '거길 놀러 갔냐'고 비난하거나, 호박(헬러윈)을 압착해 터트리는 영상 등 사망자를 조롱·희화화하는 내용도 상당수 게재
  - 전문가들은 자극적 영상·허위사실 유포가 다수 국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며,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

### □ 정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'정부 책임론' 부각 조짐

- 언론은 통상 대형참사 발생 시 '희생자 추모' ⇒ 원인 분석 ⇒ 정부 비판'의 흐름을 보이며, 점차 비판 보도를 늘리는 경향인데
  - 이태원 사고에서도 '정부 책임' 관련 보도량이 10. 30. 00~13시에는 9건이었으나, 13~20시에는 10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
  -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'정부 책임론' 부각 소지
- 트위터·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과거 헬러윈 대응 사례와 비교 하며 정부 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점증하고 있는데

## - 친여·친야 커뮤니티에는 성향에 따라 사고 원인에 대해 각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모습

- (친여) △'대통령 퇴진 촉구' 등 집회가 많아 경찰력이 부족했다며, 집회를 주도한 친야 세력 탓이라고 주장하거나 △'의경 폐지'를 추진했던 前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
- (친야) △경찰력 부족의 원인을 '용산 대통령실 이전 여파'로 해석하거나 △박원순 前 시장이 재임하던 '17년도에는 '폴리스라인'을 치는 등 대처가 달랐다고 주장

- 다만, 네티즌들 사이에 사망자 추모가 우선이라며 정치인·정당 관계자 등의 '정부 책임론' 등 정치적 이용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,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'시체팔이'라고 반감 표출

## □ 각종 유언비어가 근거 없이 회자되지만,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

- 일각에서는 '서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'며, 다른 운집 외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되나 호응은 미미

### - (마약) '펜타닐' 등 마약 투약자들이 쓰러져 사고가 촉발됐다고 주장

- <네이버 삼성폰 이용자 커뮤니티> 펜타닐에 취한 사람이 하나둘씩 쓰러진 걸 시작으로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며 사망자가 속출
- <네이버 건강정보카페> 헬스원 날 이태원에 마약 음료인 '플래카'가 풀렸고, 코로나 백신 맞은 애들이 먹고 심정지 와서 쓰러졌어

### - (가스 누출) 가스·황화수소 흡입이 원인이라는 유언비어도 회자

※ <네이버 건승코리아> 현장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, 독가스인 황화수소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와 비슷

### - 종교 관련 블로그에는 세월호 당시 제기된 '인신풍양설'도 거론

※ <기독교 블로그> 사건 현장 부근에 염소 벽화가 있는데, 염소는 '악마'를 상징

### - 온라인상에 "5~6명의 남성들이 무리 지어 '밀어, 밀어'라고 소리 지르며 군중들을 밀고 다녔다"는 미확인 목격담이 다수 회자되는데

### -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사고원인이라고 단정하며, '어떻게든 찾아내겠다', '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'는 등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

## # 불임: 과거 대형 재난사고 시 언론의 논조변화 주이 및 시사점

구분	일시	내용
① 판교 테크노밸리 붕괴사고 ('14.10.)	발생 당일 ('14.10.17.)	<p>[ 사고 발생 개요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위주로 보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연 보려다 환풍구 아래로 추락... 16명 사망, 9명 중상(조선)</li> <li>• 27명 무게 못 버틴 환풍구 덮개... '죽음의 구멍'으로(경향)</li> </ul>
	2~4일차 (10.18.~20.)	<p>[ 사고 원인에 대해 지자체·경찰·소방 등의 책임을 부각 / 지자체·주최 측 간 책임 공방도 거론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판교 축제' 주최 놓고 지자체·주관사 공방 빈축(10.18. 조선)</li> <li>• 경찰 "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안전요원 없었다"(10.19. 조선)</li> <li>• 서울 환풍구 설계 20년전 것.. 하중기준 등 다시 따져야(10.20. 한겨레)</li> <li>• 주최쪽도 경찰·소방서도 '안전점검' 외면(10.20. 한겨레)</li> </ul>
	5~11일차 (10.21.~27.)	<p>[ 수사·조사 진행 상황이 발표되며 사고의 원인 등 집중 / 관피아 논란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비난 가중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풍구 지지대 하중 실험했더니.. 3분 만에 V자 휘어 (10.21.한겨레)</li> <li>• 판교사고... '경기도 관피아' 비판 확산(10.22. 한겨레)</li> <li>•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확인 (10.27. 한겨레)</li> </ul>
	12일 이후 (11. 1.~)	<p>[ 사고 11일째 경찰·국과수 합동감식결과 발표(10.27.) 후 보도량 감소 이후로는 수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위주로 정리 수순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토부 '환기구 기준' 안전성 허점 (11.6. 한겨레)</li> <li>• 경찰 "판교사고 관련자 17명 사법처리 검토"(11.24. 조선)</li> </ul>
②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('14. 2. 17.)	발생 당일 ('14. 2. 17.)	<p>[ 사고 발생 개요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위주로 보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주 리조트 붕괴 대학생 100여명 깔려... 10명 사망(한겨레)</li> <li>• 경주 마우나리조트서 강당 붕괴... "100여명 구조 작업 중"(조선)</li> </ul>
	2~4일차 (18.~20.)	<p>[ 다수 언론이 사고의 원인에 주목 / 유족보상 문제 등도 다뤄지기 시작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붕괴 사고 때 체육관 비상구 닫혀 있었다 (2.18. 한겨레)</li> <li>• 하중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체육관을 (2.18. 한겨레)</li> </ul>

구분	일시	내용
⑥ 대구 지하철 화재 ('03. 2.)	5~10일차 (2.21.~2.26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당 붕괴 사고, 보상은 어떻게 되나?(2.19. 한겨레)</li> <li>• 코오롱·유족·대학, 4차례 보상협의 난항(2.19. 조선)</li> </ul> <p>[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, 사고 원인 등을 집중 거론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일부 부실시공 정황 포착(2.24. 조선)</li> <li>• '붕괴사고' 경주리조트 체육관 보조기둥 불트 4개 아닌 2개만 있었다 (2.25. 한겨레)</li> </ul>
	11일 이후 (2. 27.~)	<p>[ 사고 열흘째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(2.27.)되자 보도량이 감소하면서, 대책 내용과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위주로 보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붕괴' 경주 체육관, 위조서류로 건축허가 받아(3.13. 한겨레)</li> <li>• 대학 학생회, 앞으로 '신입생 OT' 독자 개최 못한다'(3.20. 조선)</li> </ul>
	발생 당일 ('03. 2.18.)	<p>[ 사고 발생 개요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위주로 보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구 지하철 방화, "한 명이라도 더"... 목숨 건 구조활동(동아)</li> <li>• 사고순간 '펑' 불길 정전... 암흑 속 뒤엉켜(한겨레)</li> </ul>
	2~4일차 (2.19.~21.)	<p>[ 화재 원인, 정부의 미흡한 대응, 전국적 추모열기 등에 집중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네티즌, '재난방지 시스템' 부재 집중성토 (2.19.한겨레)</li> <li>• 억울한 죽음 다시 없길 전국 추모 열기 (2.20. 한겨레)</li> <li>• 전동차 문 모두 닫혀있었다 (2.20. 동아)</li> <li>• 경찰 초동수사, 기관사 신병 확보 못하는 등 하점 투성이(2.20. 동아)</li> </ul>
⑦ 대구 지하철 화재 ('03. 2.)	5일 ~ 1개월 (2.22~3.19.)	<p>[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이었음을 자속 보도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구지하철공사 직원들, 화재경보 울렸으나 무시 / '낙하산 人事'가 祸 키웠다, 총체적 부실 드러나 (2.24. 동아)</li> <li>• 소방안전 지침 아무 쓸모 없었다 (3.3. 한겨레)</li> </ul>
	1개월 이후 (3.20.~)	<p>[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며 비난 기사가 이어지다, 정부·서울시·지하철공사가 1개월간 실태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에 나서며 점차 소감 상태로 전환 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구 지하철 참사, '사고 원인, 초기 현장 훼손, 사건 은폐 조작' 등 각종 의혹 여전 (3.20. 한겨레)</li> <li>• 대구참사 특별수사본부, 현장훼손 관련자 소환조사(3.22.동아)</li> </ul>

→ 대체로 사고 발생 2~4일 '정부 대처, 사고 원인' 등에 관심이 고조된다.  
정부의 중간수사결과 또는 재발방지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보도 감소

대구지하철 화재의 경우, 사고 초기 '현장훼손' 등 미흡한 대응이 노출되고 해명도 자연되며 비난 가중, 초기 수습과정에서 유의 필요